

신문 공론화와 사회통합:

강정구 교수 사건 신문보도 평가

성 한 용
한겨레신문

I. 들어가는 글

정치사회적 의제 공론화의 구실을 맡고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신문, 방송 등 기존의 보도 매체가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가 역할을 나누고 있다. 신문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콘텐츠, 특히 정치사회적 의제 생산기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신문사 편집국이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 기능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신문의 의제 설정 기능은 아직도 막강하기만 하다. 2-3개 신문이 어떤 쟁점을 며칠 동안 1면 톱으로 다루면 그 쟁점이 전 사회적 의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문의 이런 기능은 정치 사회적 쟁점의 공론화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마땅하다. 아니면 최소한 공론화의 초기 과정에서 쟁점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신문은 확실히 사회통합이 아니라 사회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사람들은 신문이 같은 사건을 며칠 동안 계속 보도하면 “지겹다”는 반응을 보인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정치적 배경을 깔고 의도적으로 쟁점을 부각시키는 신문의 보도가 지겨운 것이다.

특히 이념 문제에 대한 신문의 보도는 의제 공론화의 형식을 흉내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기여하고 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경찰의 수사, 검찰의 구속 의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도 이념 문제 보도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문이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을 부분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에 들어선 김영삼 정부부터다. 김영삼 정부는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각료로 기용했던 인사들을 내보내야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은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색깔이 불그죽죽한 사람들이 있다는 김종필 총

리의 발언은 신문에 의해 주요 기사로 부각됐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 이념 문제는 매우 위험한 의제였다. 실제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폭력에 의한 체제전복을 기도한 사람들이나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념 공세는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됐다. 가끔은 독재정권이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몇몇 신문들의 이념 공세,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정부와 또 다른 신문들의 역공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둘러싼 공방은 엄밀히 말하면 이념을 둘러싼 논쟁도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파워 게임의 성격이 더 짙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의제설정 기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신문이 정치 사회적 쟁점 공론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지 전문적인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신문사 기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의 신문이 공론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현직 기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소회와 몇 가지 착안점만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Ⅱ. 강정구 교수 사건 신문 보도

[강정구 교수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7월 27일 강정구 교수,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
-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
- 9월 2일 경찰, 강정구 교수 1차 소환
- 9월 30일 강 교수, 민교협 세미나 발언
- "미 군정청 여론조사 공산-사회주의지지 77%"
- 10월 5일 허준영 경찰청장 강 교수 구속 의사 표명
- 10월 7일 경찰 수사자료 검찰로 송치
- 10월 12일 천정배 장관, 불구속 수사 지휘
- 10월 14일 김종빈 검찰총장 사표 제출
- 10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검찰총장 사표 수리
- 10월 18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긴급기자회견

10월 24일 노 대통령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발표
10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

[동아일보 주요 기사]

10월 11일치/4면/ '강정구 구하기' 여권 팔걸었나
35면/사설/ '강정구 보호막 치기' 뭘 하자는 건가

10월 12일치/1면/톱/청와대 "강정구 교수 구속 신중해야"
4면/검찰, 구속방침 정하고도 5일째 장고
35면/사설/남북교류와 대한민국의 국기

10월 13일치/1면/톱/천 범무, 건국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
2면/"구속의견 몇시간만에..." 당혹/어수선한 검찰
3면/유례없는 수사개입...검 '거부나 수용이냐' 기로에
30면/최정호 칼럼/6.25 통일전쟁론의 아이러니
31면/사설/김종빈 총자, 끝까지 검찰독립 수호해야

10월 14일치/1면/톱"북한 반민전 지침에 이론적 틀 제공 국가 정체성 혼란시켜
구속 불가피"/검경이 영장-의견서에서 밝힌...
2면/법조-학계 "검찰총장이 판단할 문제"
3면/반민전, 강 교수 글 반미선동-대남선전에 이용
4면/김 총장, '사즉생' 으로 가나/지휘권 수용 여부 유보
5면/여 이념갈등 다시 수면 위로
35면/시론 장영수/강 교수 수사에 정치권 개입 안된다/사설/검경 의견서에 담긴 강 교수의 충격적 행적

10월 15일치/1면(정체성 혼란 한국호 어디로 가나2.3.4.5.6.8면에 관련기사)/김
검찰총장, 수사지휘 수용-사표/검사들 불만...집단반발 우려
2면/고개는 숙이지만 같이 갈수는 없다
3면/여권에 미운털...독립성 확보 험난
4면/강정구 구하기-대북길땀기-정상회담?
5면/일부 진보세력 이념도발로 체제 흔들기
6면/교과서도 '반시장-반기업' 편향적 서술
8면/여 "사퇴할 일 아는데...유감" 야 "천 장관도 같이 물러나라"

35면/시론 허영/또 드러난 후진적 법치문화/사설/천정배 장관 '검찰 지휘파동' 책임져야

- 10월 17일자/1면/툭/청와대, 검찰반발에 강력 경고
3면/'정체성 혼란' 한국호 어디로 가나/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듣는다/
"자명한 것 오도하는 일부 지식인이 문제"
4면/청 "검찰에 밀리지 않겠다" 쟁기
5면/천파만파
31면/사설/'친북좌파' 들보는 게 '검찰보호' 인가

- 10월 18일치/1면/툭/이해찬 총리 천정배 법무 신기남 의원, 과거엔 '수사지휘권 폐지' 앞장섰다
3면/정체성 혼란 한국호 어디로 가나/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노 정부는 왜 미움을 버리지 못하나"
4면/정치적 입장 바뀌자 '소신 뒤집기'
5면/지휘권 발동은 역시 '노심'
34면/이규민 칼럼/왼쪽으로만 도는 우리사회 운전대
35면/사설/'지휘권 폐지'가 소신이었던 천 장관과 이 총리

- 10월 19일치/1면/천 법무, 현정권초 "장관 수사개입 부적절" 주장
2면/박 대표 "노 대통령은 정체성 밝혀라" 청와대 "유신독재 망령" 박 대표 공격
3면/일 법조인이 본 한국의 수사지휘권 파문/"일 법무상들 '지휘권 발동안해' 취임때 공개다짐"
4면/소신 뒤집기/영똥한 비교/언론 탓하기/헛갈리는 '천의 잣대'
5면/"좌경화가 대한민국 심장 위협"/보수인사 9590명 2차 시국선언... 북 인권 관심 촉구
6면/강정구 불씨 정치권 전면전 비화
35면/사설/정권이 '국가 정체성' 흔들지 않았단 말인가

- 10월 20일치/3면/정체성 혼란 한국호 어디로 가나/강원용 목사/"향후 2~3년이 대한민국 존망 결정"
5면/'시대' 아닌 '입지'가 소신 같았나/천 법무 수사지휘권 신념 바꾸기 배경은 뭘까
35면/칼럼 제성호/천 법무 지휘권 행사는 '월권' /사설/대연정 제의 스스로 부정

한 대통령

10월 21일치/1면/"나라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걸 대통령과 집권층은 깨달아야"/김수환 추기경 본보 특별회견

3면/정체성 혼란 한국호 어디로 가나/김수환 추기경/"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나"

5면/"무조건 네탓" 덮어씌우기 판친다

35면/사설/검찰 정치적 중립 요구가 '색깔론' 인가

10월 22일치/5면/본보 '정체성 혼란 한국호' 연쇄인터뷰 '어른들 말씀' 커다란 울림

31면/칼럼 최홍재/'어른들 말씀' 에 뒤를 돌아봅니다/사설/정권부터 /혹세무민 말고 원로 충고 들어야

10월 25일치/1면/"강정구 구하기는 정상회담 길잡이용"/국회 대정부질문

4면/국회서 불붙은 국가정체성 논란

34면/배인준 칼럼/송김 통일꿈과 노 정권

10월 26일/사설/정권 정통성 스스로 혼든 이해찬 총리

[조선일보 주요 기사]

10월 13일치/1면/툭/천 법무, 헌정사상 첫 지휘권 발동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하라"

2면/2단/강정구 교수의 말말말

3면/"검찰 길들이기...총장은 지휘권 거부해야"

35면/사설/이 정권은 강정구씨의 국선변호인인가

10월 14일치/1면/툭/'강정구 교수' 검찰서 재수사

2면/천 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3면/"지휘권 수용땀 검찰 무너져" 반발...김 총장 '시간벌기'

4면/학계 "통일전쟁은 북의 북침 정당화 논리"/강정구 교수 주장과 학계의 정설

30면/시론 김원치/법무장관이 왜 '수사지휘권' 행사하나

31면/사설/이 정권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공격을 계속할 것인가

10월 15일치/1면/톱/"지휘권 수용" 검찰총장 사표

3면/"오늘은 치욕의 날, 검찰 짓밟은 천 범무도 퇴진하라"

4면/수용 발표 때 왜 사의는 안 밝혔나

5면/"북한 역사책과 내용, 문맥 똑같아"/강 교수 주장 이적성 있나

31면/사설/법과 검찰과 검찰총장의 목을 조른 법무장관/튀어서 눈길 끌려서 대학가의 강정구 무리

10월 17일치/1면/왼쪽 2단 상자/현직검사, 천 장관에 직소 이메일

1면/톱/청와대 검찰 총돌 조짐

3면/"노 대통령 화났다" ...검찰 "천 장관 지휘 못받아"

4면/시민단체, 법조계 "천 범무 퇴진 장외투쟁"

5면/"송두율 처벌 곤란" 때와 같은 듯/노 대통령 '강 교수 사태' 어떻게 볼까

31면/시론 강훈/법무장관이 물러나야 할 이유

31면/사설/국민이 현 정권한테 묻는 다섯 가지 질문

10월 18일치/1면/'지휘권 삭제' 입법청원안 천 범무, 4년 전 국회 소개

3단/"검찰의 정치적 중립 꿈 무너져"

1단/"현 정권 이성 없었다"/박근혜 대표

2면/4년 전엔 "외풍 막아야" 지금은 "정당한 권한"

4면/김 검찰총장 퇴임 "외압에 굴복하는 검찰, 국민은 원하지 않아"

5면/여 '강정구 구하기' 도대체 왜? 보수에 대한 체질적 반감 표출

34면/유근일 칼럼/'대한민국 세력'의 불가피한 세력

35면/특별기고/제러미 수리/강정구 교수의 '한국전' 왜곡/사설/'선출된 권력'도 헌법 아래 있는 것이다/사설/청와대가 읽어야 할 총장 퇴임사 속 법학원론

10월 19일/1면/톱/한나라 "정권이 국가 정체성 위협" 청와대 "극우 냉전체제 부활기도"

3단/시민단체들 거리로 나섰다.

3면/대연정 하자더니... 청와대 "유신, 수구, 독재" 한나라 맹공격

4면/"96년 지휘권 삭제 주장... 지금 생각 바뀌었다"

5면/주한 남아공대사관 "장시기 교수 주장 틀리다"

-천주교 원로 정의채 몬시뇰 충고/"전대미문의 지휘권 파문 이 정권 실제 의심כה 해"

34면/김창균 칼럼/"강 교수, 북에 와서 한번 살아봐"

35면/사설/천 법무 지휘권 소신은 '코걸이 귀걸이' 식인가/사설/여권은 지휘권 사태의 본질을 이탈하지 말라

10월 20일/35면/시론 유석춘/공수 뒤바뀐 색깔론
35면/사설/말바꾸기 선수들인 이 정권의 발언록

10월 21일/34면/변용식 칼럼/"차라리 내가 북한 사람이었으면..."
35면/칼럼/천 장관은 여기서 물러나는 게 정도다.

10월 24일/30면/김대중 칼럼/청와대, 이성 잃었나 '제정신' 차렸나

[경향신문 주요 보도]

10월 11일치/31면/사설/ '학문의 장' 에 맡겨야 할 '강정구 논란'

10월 13일치/1면/4단/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
3면/ '천의 소신' 에 발각...후폭풍 거셀 듯

10월 14일치/1면/툭/검 '지휘권 수용' 일단 유보
2면/ 청 "지휘권 발동은 단순 법리문제"
3면/ 검 중립성, 조직안정 고려 신중접근
4면/"권한행사 합법" "헌정질서 파괴"
6면/다시 불붙는 "보안법 폐지"
27면/사설/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10월 15일치/1면/툭/검 검찰총장 전격 사퇴
2면/단호한 청 '조기수습' 가다
3면/ 법 지키고 검 조직 보호 '교육지책'
4면/ "사퇴사안 아난데..." "지휘권 제한해야"
23면/사설/많은 과제 남긴 검찰총장 전격사퇴

10월 17일치/1면/2단/"검찰 문민통제 필요 김총장 처신 부적절"
3면/ 청 '항명' 간주... 검 개혁 부르나
8면/ 경찰, 처음부터 '강 교수 구속' 작심?
31면/ 사설/ 감정대응 삼가야 할 수사지휘권 파문

10월 18일치/1면/3단/천 법무 “검찰 흔들 보복성 인사 없다”

2면/기자메모/검찰의 처신과 ‘두사부일체’

3면/여 “본색 드러낸 검 이참에 수술”

4면/“유신잔당 망령 부활” “천 한때 폐지주도”

30면/칼럼 손동우/‘찬양고무’에 대한 단상

31면/사설/‘자유인 김종빈’이 남긴 것들

10월 19일치/1면/4단/검찰도 ‘지휘권’ 입장 뒤집었다.

1면/3단/박대표 “국가정체성이 흔들린다” 청와대 “유신독재 망령 되살아나”

4면/“유지” “폐지” 고비마다 소신바꾸기/검정시민단체도 혼란

5면/“국민과 함께 구국운동” “유신당 색깔론 총궐기”

30면/고승덕 칼럼/천 법무장관님께

31면/사설/시대착오적인 박 대표의 ‘구국운동’/사설/공인들의 말바꾸기 혼란스럽다

10월 20일치/4면/“병든당” “좌익당” 막말 공방전

10월 21일치/27면/시론 정태호/검찰권 행사 민주적 통제 마땅

10월 24일치/35면/아침을 열며 조성환/정체성 논란과 기득권 다툼

10월 25일치/5면/정체성 싸고 흠집내기 공방

30면/경향의 눈 박노승/그들은 일언반구 응답이 없다

[한겨레 주요보도]

10월 13일치/1면/툭/천법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4면/‘찬양 고무죄 삭제 의지’ 검찰과 정면충돌

10월 14일/1면/툭/김 총장 ‘천 법무 지휘’ 수용 유보

1면/사설/지휘권 발동 ‘생산적 논의’로4면/한나라 “헌정파괴...대통령 사과해야” 열린 우리 “정당한 권한”... 강 교수엔 ‘거리’

5면/‘구속수사 관행’ 논란 본격화되나

10월 15일치/1면/툭/김종빈 검찰총장 사표
2면/“조직위해 불가피” “사표 낼 사안인가”
3면/지휘권 법 따르지만 ‘식물총장’은 거부
6면/‘물’ 만난 한나라 또 ‘색칠놀이’
19면/사설/검찰총장 사퇴 유감스럽다

10월 17일치/1면/툭/천 법무 “반인권 공세 멈추라”
1면/“검찰권 민주적 통제 필요” 청와대, 김종빈 총장 사표 수리
3면/“검찰을 ‘시너’ 삼았던 세력이...”
4면/청와대, 사표제출 ‘항명’으로 여겨
23면/사설/검찰,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자

10월 18일치/1면/3단/천 법무 “검찰 흔들기 지휘권 남용 없을 것”
4면/시대 거스르는 검찰 공안부 개혁을
5면/청와대 우리 “개혁보단 안정 먼저” 한나라 “헌 정권 이성 잃었다”
30면/도종환 칼럼/구속수사 이후
31면/세상읽기 김갑수/평양에 가서 살라고?/사설/정치권은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

10월 19일치/1면/툭/여야 ‘수사 지휘’ 대결 격화
2면/강 교수 구속근거가 인터넷 여론조사?
3면/“지휘권 소신 왜 말바꾸냐” “검찰독립 시대상황 변화”
22면/아침햇발 광병찬/팝콘, 그리고 국가 정체성
23면/사설/그들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10월 20일치/3면/과거 공안사건 수사와 ‘닭은 꿀’

10월 21일치/5면/“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26면/아침햇발 성한용/위기의 박근혜

10월 22일치/19면/편집국에서 오태규/강정구와 구로다 가쓰히로

10월 24일치/22면/아침햇발 김지석/개혁적 보수, 대중적 진보

10월 25일치/6면/‘지겨운’ 색깔공세 ‘입아픈’ 원론방어

10월 26일치/23면/세상읽기 이영자/분단사회의 자기모순

[눈길 끈 기사 사례]

조선일보 10월14일치 4면기사

강 교수 “6.25는 북이 주도한 통일전쟁 내전”/학계 “통일전쟁은 북의 남침 정당화 논리”/강정구 교수 주장과 학계의 정설/강 교수 “해방직후 여론은 공산사회주의 지지”/학계 “소련 북한식 국가사회주의는 아니다”

중앙일보 10월24일치 1면 여론조사 보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84%/“강 교수 구속” 34%/“불구속 수사” 31%/“학문에 맡겨야” 33%/“지휘권 발동에 공감 안해” 64%/“천 범무 물러날 필요 없어” 53%

Ⅲ. 보도의 문제점

1. 지나치게 선동적인 제목

앞에 정리해 놓은 4개 신문의 강정구 교수 사건 관련 기사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매우 공격적이었다. 칼럼의 제목은 그렇다고 치고, 종합면의 기사와 사설제목까지 극도의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제목은 만드는 신문사 종사자들이나 사건 당사자들, 그리고 정당 관계자들은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으나, 차분한 의제설정 및 공론화, 그리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목만 보면, 사설인지 해설인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스트레이트 기사인지, 아니면 독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선동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균형잡힌 기사의 부족

앞에서 사례로 든 두 가지 기사는 그런대로 괜찮은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본 것이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독자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신문은 찬반의견을 떠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문에서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차분하게 짚어준 기사를 찾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찬성과 반대의견을 동일한 지면에 같이 실어서 균형을 취한 신문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다. 선진국의 신문이 사실에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만, 스트레이트와 해설에서는 가급적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IV. 원인 분석

1. 언론의 미성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신문이 이념보도에서 극도의 편향성을 보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다. 그 가운데 신문 내부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신문은 위기를 맞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만, 질적수준은 독자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2003~2004년에는 전체 가구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50%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광고물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30%대로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물론 신문의 이런 영향력 축소에는 인터넷 매체 활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문이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독자들은 신문을 믿지 않는다. 과거에는 “신문에 났다”고 말하면,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신문에 났다”고 하면, 대화의 상대방은 “어느 신문에 났느냐”고 묻게 될 정도로 신문의 정치적 편향성과 독자들의 의심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신문의 침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과거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던 정보 수요계층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질을 구분해서 받아들이야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문독자들은 신문에서 뭔가 새로운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깊이있는 해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신문은 이제 정보 수요계층의 이런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올해 5월 서울에서 세계신문총회가 열렸는데, ‘the INNOVATION International Media Consulting Group’에서 만든 문서가 하나 보고되었다. 이 문서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문변화 및 개혁(changing and improving

newspapers)을 연구해 얻은 교훈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신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신문'과 '왜-신문'이 미래다(Views-Paper and Whys-Papers Are the Future.)-우리 독자들은 절실하게 우리한테 묻는다: 제발, 더 얘기해 달라, 이유를 얘기해 달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얘기해 달라,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 달라(Please, tell me more, tell me why, tell me what this means, tell me what's next)

당신의 신문은 취재원이 던져주는 "뉴스"를 단순히 그냥 기록(Record)하려는 것이 아니다.(Your newspaper is not in business to simply record the "news" put out by your sources.) 독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이런 '두뇌 없는 녹음기 저널리즘'은 다른 미디어한테 넘겨라. 설명하라(Leave this brainless tape-recorder kind of journalism to other media. Explain.)

내용, 내용, 내용에 집중하라. 그 과정에서 디자인, 사진, 임포그래픽을 집어넣은 것이다(Focus on Content, Content, Content, with Designers, Photographers, and Infographers, Participating!)-콘텐츠의 변화만이 독자와 광고주를 즐겁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문제는 예쁜 빈병이 아니라 속에 있는 와인이다!(All These Lessons About Changing Formats Can Be Summarized In Just One Big Lesson: It's Not the Bottle, but the Wine!)-내용이 왕이다.(Content is King)

전 세계의 신문독자들이 신문에 '컨텐츠'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한국의 신문들은 아직 독자들에게 컨텐츠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각 신문의 간지를 보면 상당히 양질의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갈망하는 것은 간지의 컨텐츠가 아니다. 간지의 컨텐츠는 사실 웬만한 잡지에 다 나오는 것이다. 독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특종과 탐사보도, 깊이 있는 해설을 요구하고 있다.

조금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신문이 갈수록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신문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신문이 정보원이 제공하는 단순한 사실을 논평 없이 전달하거나,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독자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한, 또 사실관계와 가치평가를 구분하지 않는 '무도한' 기사를 계속 신문에 실는다면, 앞으로 독자들은 갈수록 신문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신문은 망할 것이다.

신문의 수준의 문제는 공론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신문의 본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수준이 높은 신문은 공론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신문이다. 반대로 수준이 낮은 신문은 자신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기는 구실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실 기사를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갈등을 부추

기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사를 쓰기가 훨씬 더 쉽다. 방향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조금 무리한 논리를 동원해도 되고, 부족한 팩트를 비판적 문장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신문이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자들과 신문의 '수준'을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다수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학설'을 말 몇 마디로 떠든 교수를 구속하겠다고 달려든 검찰이나, 그 구속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을 정면으로 문제삼은 신문, 그에 대립해서 반대 여론만을 기사나 사설로 쓴 신문, 모두 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문의 경우 의제설정과 공론화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한국 신문의 낮은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신문의 정치적 편향성

한국의 신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한, 아니 독자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각 신문사는 부인하지만, 여론 주도층이나 독자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편이라고 평가한다. 반대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당지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의 정당이 지역을 지기지반으로 하고 있는 탓에, 신문에 대한 지역 편향성도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영남,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호남에 각각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각 신문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사가 사시로 '불편부당'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문사 사주나 경영진 뿐 아니라 기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은 실제로 심해지고 있다. 공식 통계는 집계된 바 없지만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신문사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이회창 후보를 찍었고, 진보 성향의 신문사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노무현 후보를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12월18일 밤 정몽준씨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을 때, 한 보수 성향의 신문사 편집국에서는 박수가 터진 일이 있다. 또 2004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을 때 보수 성향 신문사의 한 기자는 기자실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흥분해서 외친 일이 있다.

반대로 1997년 12월 18일 밤과 2002년 12월 19일 밤 개표 방송에서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을 때, 진보 성향 신문사의 주변 술집은 만원 사례를 이뤘다. 또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진보 성향 신문사의 한 기자는 여의도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영영 울음을 터뜨렸다.

신문사 기자들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은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신문이 어느

한쪽의 편을 강하게 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을 제작하는 기자들도 사람인 이상, 정치적 편향성이 강할 경우, 다양한 가치의 공존,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기 보다는, 나와 반대 쪽 진영을 어떻게 해서든 찍어 누르려고 하고, 반대 쪽의 실수와 잘못을 기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신문의 공론화 기능 활성화와 사회통합 기여를 위해서는 기자들이 보다 중립적인 태도와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선발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정부와 언론의 적대적 관계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언젠가부터 조,중,동 이라고 부른다. 세 신문은 신문시장에서 7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과는 별도로, 메이저 신문들과 정부의 비정상적 관계가 공론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문과 정부의 관계를 시대별로 나눠 정리해 보자. 신문과 정부를 힘의 관계에서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까지는 정부가 확실히 우위에 서 있었다. 신문의 부분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대개 정부에 의해 진압 당했다. 신문사가 폐간되기도 했고, 기자들이 신문사에서 대거 쫓겨나기도 했다.

변화의 조짐은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찾아 왔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부분의 신문에 노조가 생겼고 지면감시 활동을 펼쳤다.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이 창간됐다. 정부의 힘이 현저히 약해졌지만, 역전되지는 않았다. 1992년 김영삼 정부에서도 정부의 통제력 약화 추세는 계속됐다. 김영삼 정부는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신문에 대해 겨우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터져 나온 김현철씨 비리 사건을 계기로 확실히 정부와 신문의 힘의 관계는 역전됐다. 신문들의 무차별 공격에-일부 내용은 확실히 과장보도였다- 정부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권은 속수무책이었다.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권은 신문과 공존을 시도했다. 하지만, 곧 인내심에 바닥이 났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취약점인 지역문제를 끊임없이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5월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보광그룹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했다. 홍 사장은 구속됐다. 한 번 칼을 뽑은 정부는 전면전까지 나갔다. 2001년 1월 중앙언론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한 뒤, 2월 8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는 6월 20일 발표됐다. 탈루소득 총 1조3594억원, 탈루법인세 5056억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6월 21일 13개 언론사에 242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발표했다. 추징액은 조선일보가

864억원, 동아일보 827억원, 중앙일보 850억원이었다. 검찰은 8월 17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조희준 국민일보 회장을 구속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신문들은 격렬히 정부를 비판했다.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의 부인이 자살한 사건은 정부에 대한 동아일보의 적대감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김대중 정부를 승계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분명히 적대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한겨레신문을 갑자기 방문하는 등 자신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을 싫어하고 한겨레신문을 좋아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한겨레신문은 여당지라는 평판이 부담스러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분리해 내는 전술을 쓴 것 같다.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에 임명한 것이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렇지만 중앙일보와 노무현 정부가 좋은 사이라는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는 첨예한 쟁점에서 정부의 편을 든 일이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의 중앙일보 분리 전술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아무튼 노무현 정부의 메이저신문사에 대한 반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누군가 조중동과의 '화해'를 권하면, 화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문과 정부의 관계는 긴장관계가 정상이다.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문제는 신문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메이저신문과 정부가 필요 이상의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메이저신문의 사회적 의제 '공론화'가 지나치게 반노무현편향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사설이나 기사의 제목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인격적으로 깔보는 측면이 있다. 독자들은 신문에서 '시원한 비판기사'를 보고 싶어 하지만, '일정한 품위'를 요구한다. 독자들이 갈수록 신문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신문시장에서 절대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중동의 지나친 적대감이 포함된다고 본다.

4. 토론 문화 부재

언론사 내부의 문제 및 언론과 정부의 관계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도 있다. 바로 토론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직도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 위주로 되어있다. 주입식 교육에 토론과 논쟁이 설 땅은 없다.

신문에 토론이 실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한겨레가 왜냐면이라는 지면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릴레이식으로 다뤄보려 하고 있지만, 그리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다. 토론과 논쟁이 독자들에게 읽히고 인기가 있다면 신문은 토론과 논쟁에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텔레비전 토론은 신문에 비해 활성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주장을 내놓고 싸움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도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은 유익하다.

토론과 논쟁의 전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할 때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듣고, 내 의견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절충을 시도하거나 해법을 찾는 것은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싸움을 우려해서 입을 닫게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침묵의 강요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서열과 그에 따른 승복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아랫사람이 하는 올바른 말을 경청하는 윗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합리성보다는 권위주의가 우위에 있는 것이다.

물론 토론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고 해서 신문이 토론을 지면에 신지 않는 것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신문은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을 어떻게 지면에 담아낼 것인가, 즉, 재미있는 토론 기사, 흥미로운 의제를 발굴해서 지면을 꾸며낼 의무가 있다.

V. 대안

한국의 신문은 모두 대중지다. 고급지를 지향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신문도 대중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고주들이 광고단가의 근거를 발행부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미있는 기사가 필요하다. 아무리 중요한 기사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신문에 신기 어렵다. 공론화와 의제설정, 사회통합은 재미있는 기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공익성과 흥미를 조화시키는 편집과 기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문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 무슨 사건이든 그 현안의 전후좌우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과거의 유사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을 해주어야 한다. 쟁점의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짚어주어야 하고, 특히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낱낱이 드러내 주어야 한다. 누가 어떤 주장을 펼 때, 그 주장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인지, 그런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 주어야 한다.

독자들에게 가치를 강요하지 말고,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쟁점을 둘러싼 진지한 토론으로 지면을 구성해야 한다. 토론에는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켜야 한다. 신문에서 방향을 미리세우고 의견이 같은 사람들만 토론에 참여시킬 경우 그 토론은 일종의 '사기'가 된다. 물론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래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강정구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학계의 여러 가지 이론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으며, 강 교수의 주장이 그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야 한다. 강 교수의 발언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한 발언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강연의 앞 뒤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했어야 한다. 그의 주장이 말이 되고 안되고는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비판을 하려면 별도의 기사로 비판을 했어야 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고 해서, 현 정부의 정체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논리였다. 정부관계자들도 강교수의 발언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불구속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런 주장을 충분히 다뤄야 한다.

팩트와 가치를 섞어서 보도하는 한국신문의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신문 제작 태도는 일종의 계몽주의적 태도로서, 독자들의 수준을 깔보는 것이다.

신문이 사회의 원로라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어떤 쟁점에 대해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요하려는 현상이 있다. 원로들의 지혜를 듣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너무 자주 등장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원로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고, 쟁점과 관련한정보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로 인터뷰가 아니라, 토론과 논쟁이 신문의 종합면에 큼지막하게 실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Ⅶ. 마무리 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 보도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이 지난 신문철을 찾아보며 느낀 점이 있다. 신문이 과잉보도를 했다는 점이다. 당시의 대부분의 신문보도는 결과적으로 틀렸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진작에 사퇴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 신문들은 검찰에서 조직적인 반발이 있다고 했지만, 심지어 부추긴 측면도 있지만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다. 검사들은 이번 사태를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물론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고 물러난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물러날 수도 있다.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그만이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번 사건은 중대한 문제겠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현 정부에 대한 이념 공세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검찰의 구속 방침,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연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할 가치가 있었을까? 1면이 아닌 종합면에 강 교수의 발언이 과연 적당한지, 사법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쟁, 좌담을 내보낸 신문은 없었다. 아쉬울 뿐이다.

또 한 가지,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10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터졌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부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 하면서 '구국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신문은 박 대표의 발언을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하지만 구국운동은 없었다. 그리고 네 곳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승리한 뒤 '강정구 사건'은 신문지면에서 사라졌다.

현 정부의 정체성을 문제삼은 신문들이 이 사건을 한라당에 유리하게 몰고가기 위해 그렇게 보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그런 신문들을 공격한 신문들도 열린우리당을 돕기 위해 보도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사건을 증폭시킨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양쪽 모두 해야 할 것 같다.

'신문은 흥기'라는 말이 있다. 영향력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문의 위력은 아직도 대단하다. 의제 공론화와 사회통합에 신문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말하면 거꾸로 기여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해 신문사 구성원들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